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2021 | 통권 제 186호

# 강원 의정



표지설명: 위는 왼쪽부터 회음동정사지, 오른쪽 노동당사, 아래는 화천수력발전소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 의원현황

## CONTENTS

04	<b>인사말</b> · 강원도의회 의장	02
	<b>제303회 임시회</b>	04
	<b>의회 핫이슈</b> ·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 지원 촉구 성명 발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원주시 연결 촉구	06
06	<b>상임위원회 활동</b>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10
08	<b>5분 자유발언</b>	16
	<b>도의회 자료실</b>	21
	<b>의원수첩</b> · 허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최종희 의원(국민의힘·비례) ·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심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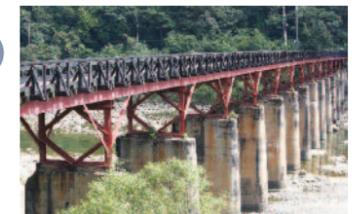
# 강원 의정

GANGWON · PROVINCIAL · COUNCIL · JOURNAL

2021 Vol.186

통권 186호 | 2021년

	<b>조례 Q&amp;A</b>	32
	<b>정책 제언</b>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	40
	<b>뉴스 포커스</b>	44
	<b>포토 포커스</b>	46
	<b>언론 속 의정</b>	48
	<b>연구회 탐방</b> · 일자리 소상공인연구회	50
	<b>강원 인문학</b> · 철원 노동당사 · 구(舊) 철원제일교회 · 화천 화음동 정사지 · 화천수력발전소와 꺼먹다리	52
	<b>도의회 연간 일정</b>	56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실겠습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광도영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고영선  
기획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문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 도의회 개원 65주년, 현장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만물이 열매를 맺고 산야가 오색으로 물드는 가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자연이 주는 결실의 풍요로움 속에서 코로나-19로 힘겨운 마음을 위로받는 계절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활 현장 곳곳 깊숙이 파고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만큼,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밑거름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9월 6일은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5주년을 맞아 강원도의회는 다시 한번 도민 행복을 위한 다짐을 해봅니다.

강원도의회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하고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집중호우, 아프리카돼지열병, 산불 등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민이 숨 쉬는 현장에서 늘 발로 뛰며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주시고 꾸짖어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이전보다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원 65년을 맞은 강원도의회가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곽도영**

“강하고 실력있는 의회,  
흔들리지 않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 및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 “도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은 살림살이 위해 총력 다할 것”

강원도의회는 9월 2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9월 10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차에 걸쳐 본회의가 열렸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조례를 심의하였다. 9월 6일에는 개원 65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식과 제23회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8개의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지역 미션정대학 재정 지원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원주시 연결 축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 + “도민 안전과 건강 위해 총력 다할 것.”

곽도영 도의장(더불어민주당·원주5)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증가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하였던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등 도민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살림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도민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식(더불어민주당·영월1)은 “알펜시아 매각 논란은 종식돼야 하며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하였다. 김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구)은 “평화지역 대책이 불분명한 만큼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상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2)은 “평창 스

키점프대 경기장을 강원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심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별도 설치와 지역방송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심영섭(국민의 힘·강릉1)은 “강릉 남대천을 경포와 연계한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내 상시적 신종 감염병 대응조직의 필요성과 보건의로 인력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윤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1)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원인 규명과 합당한 벌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에 따라 현 정비업에 대한 지원 등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 평화지역, 세계산림엑스포 현장 등 점검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소관부서의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였고 현지 시찰을 진행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 일정 및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를 협의하였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심의하고 양구, 인제 등 평화지역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을 심의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였고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현장을 시찰하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강원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병원Wee센터(춘천권역)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회기에 상정된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이었다.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위기지역 도외시한 불공정한 진단, 추가 재정지원 필요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 지원 촉구 성명 발표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진단 결과에서 강원지역은 2개 대학만이 선정돼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강원·충청 권역 22개 진단 참여 전문대학 중 15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충청지역은 13개 대학(86.7%)을 선정했으나, 강원지역은 2개 대학(13.3%)만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추진된 불공평한 진단이라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강원지역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비율을 10개 지역 평균 수준인 80% 이상 배정해 줄 것과 지역소멸위기지역에 대한 평가 가중치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진단 결과에 변함이 없자 도의회는 9월 2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 지원 촉구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도의회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처럼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비율을 90% 이상 배정해 줄 것, ‘코로나-19’ 등으로 대국민 화합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미선정된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할 것,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평가 가중치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 성명서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되었다.



### 성명서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촉구 성명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선대학들은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급감,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증가에 따른 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일선 대학에 대하여 성원하고 응원하기는커녕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이라는 획일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3년 동안 일반재정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미선정된 대학이 마치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되도록 하여 지역대학 및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재정지원 대학 선정 구조가 90%는 권역별로 선정하 후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평가위원의 눈높이가 권역별로 차이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지방 소재 대학에 불리한 평가구조인 것이다.

특히 강원·충청권역 22개 진단 참여 전문대학 중 15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충청지역은 13개 대학(86.7%)이 선정되었으나, 강원지역은 2개 대학(13.3%)만이 선정됨으로써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마저 실패하였다. 백년지대계인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평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신·편입에 관한 제도 역시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에 입학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부족 현상을 지방 대학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처럼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평가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대학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비율을 90% 이상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대국민 화합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미선정된 대학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평가 가중치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9월 2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 GTX-A 노선, 광주 거쳐 원주까지 연장하라!

## 강원도의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원주시 연결 촉구' 건의문 발표

강원도의회는 9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원주시 연결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원주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동탄에 이르는 구간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GTX 도입 노선 대안 및 최적 노선안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3일 경기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비전선포식에서, 4개 지자체장들은 GTX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4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GTX-A 노선에 수광선(수서~광주)을 직결하여 경강선(경기~강원)에 접속시키면 광주~이천~여주~원주시에 GTX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광주부터 원주까지 GTX-A 노선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GTX-A 노선이 원주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교육, 의료, 문화, 경제 등 광역 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난 수십년 간 수도권법과 환경법 등 중복규제로 불편을 감내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매년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며, "미래의 강원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TX-A 노선을 수서~광주선과 연결하여 광주~이천~여주~원주 구간까지 연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건의문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원주시 연결 촉구 건의

그동안 수도권 1,0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혀 국가 균형발전에 서 매번 소외되었던 강원도에 시급한 철도 인프라 확보는 향후 낙후된 강원경제의 발전과 한국판 그린뉴딜 완성을 위해서라도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핵심요소이다.

GTX가 지금의 정부안과 같이 추진된다면 수도권 동남부 지역만 GTX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으로 남게 되며, 이는 그간 수도권법·환경법 등 중복 규제로 수십년 간 불편을 감수해왔던 강원도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내륙철도의 여객 및 물류가 환승 없이 남북한과 유라시아로 연결되어 북방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의 과밀 주택문제 해소,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교육, 의료, 문화, 경제 등 광역 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비수도권과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GTX-A 노선을 수서~광주선과 연결하여 광주~이천~여주~원주 구간까지 연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9월 10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 원격 출석해 발언 및 표결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개정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5건을 심의하였다.

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에도 의회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개정을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를 통하여 전자회의시스템 활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전자투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차기 회기를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본 회기 기간 중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 주요처리 안건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제3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3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21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규호



### 전국 최초 명예소방관 제도 운영 기틀 마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대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추가하여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 통과로 전국 최초로 '명예소방관' 제도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민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6일에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심의 과정 중 명예소방관의 자격과 위촉 및 해촉에

9월 7일에는 양구, 인제 등 평화지역을 방문해 현안사업을 점검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
-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지역 선정대학 확대」 성명서 발표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장덕수



###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위한 조례 가결

사회문화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9월 7일까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다수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구성을 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등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 현장 시찰

농림수산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회 발의 조례안 상정을 의결하였다. 9월 8일에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현장을 현지 시찰 하였다. 이번에 심의한 조례안은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중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

고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해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다.

9월 8일에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에 나서 추진 상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와 지방선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1회성 행사가 아닌 국제적 박람회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속초, 인제, 양양 등 인접지역의 산림 관련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과 행사장 내 강원도 야생화 식재 등을 통한 강원도 홍보방안을 주문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 현장 현지시찰 (고성군 토성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원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경제건설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약화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하천점용료가 감면되고 「하천법」 개정으로 사용료 단가를 정비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것이다.

심사 결과 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를 약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천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재연

###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초점

교육위원회는 9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심사를 통해 4개 사업 14억 1,47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3,469억 1,100만원) 증가한 3조 5,288억 1,000만 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모든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추진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또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학교 태양광발전 공익투자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9월 7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이들 조례안을 통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학도병 선양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 202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본회의 / 9월 2일

- 지난 8월 20일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 원에 매각하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음.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동계스포츠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 500여 명의 직원들 고용 승계, 받아야 할 나머지 잔금 및 남아있는 부채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
-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에서 1조 원 이상의 빚을 내서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매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봄. 하지만 매각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 대해 험갈 매각, 입찰 담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 같음. 그리고 인수회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 700억 원은 개발공사가 몰취한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며, 회원권 부채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할 잔금 3,812억 원은 그룹사 지원, 재무적 투자자들과 담보대출로 충당

알펜시아  
현안사항에 대해



김경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영월1)

하는 것이 매각 주관사인 회계법인의 판단이고, 기업의 인수합병 시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인수회사의 설립 시기와 자본금 규모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임.

○ 그리고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4차 공고까지 1조 원에서 8,000억 원까지 입찰 가격이 세 차례 변동되었을 때 단 한 곳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회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험갈 매각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봄.

⇒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음. 기업의 인수합병절차를 영업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세세하게 공개할 순 없겠지만 사인의 중요성을 감안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언론과 시민 단체에 밝히고 거래가 완료된다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함.

- 지난 8월 20일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알펜시아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음.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세부적인 매각조건, 자금의 조달 계획, 입찰담합 의혹 등에 대하여 도의회와 도민들께 해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스포츠지구의 험갈매각설에 대한 명확한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야 함.
-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는 경기장을 기업이 매수할 리 없으며, 이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음. 만약 이 시설들이 매각되어 없어지거나 그 용도를 상실할 경우 동계 스포츠인들의 어마어마한 지향에 부딪힐 것은 자명한 일임.

⇒ 평창의 스키점프대 경기장을 강원 FC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그 장점으로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스키점프경기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이 됨. 두 번째는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전

올림픽 시설 활용방안



김진석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평창2)

용구장으로 사용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됨.

세 번째는 지리적으로 영동과 영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명 빅 3 도시 춘천, 원주, 강릉 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음.

네 번째, 선수단 숙소가 위치한 강릉의 오렌지하우스와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한여름에도 시원한 해발 700m의 대관령에 위치해 있어서 선수와 관중이 만족하는 스포츠 경기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을 것임.

다섯 번째, 예산 절감 부분 중 일부를 구단에 좀 더 지원한다면 경기력 향상으로 경기단의 승률이 높아져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관중수의 증가와 축구를 통한 도민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임.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강원도 내의 균형발전으로 연계시킬 수 있음.

-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남북교류 업무 총괄 및 평화지역의 문화, 숙박, 경관개선 등의 업무를 펼치고 있으며, 당초 2019년 9월 30일이 시한이었으나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한 시기구에서 자율 신설기구로 편입해 2년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음.
- 본부가 운영된 3년 동안의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3년 동안 국방개혁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국방부와 강원도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평화지역 5개 군에 평화누리길 조성 등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등 생태 평화벨트 조성과 을지전망대 등의 안보 견학시설 보수 등의 성과가 있음. 그리고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통한 붐업과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개하였음.
- 평화지역 제도 개선과 기반조성 사업, 특히 3년간의 시행착오를 점검하면서 지역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김규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양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봄.

○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31개 시군 중에서 3곳(김포, 파주, 연천)이며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서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이룸. 그럼에도 경기도청 조직에는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이 상시기구로 있음.

⇒ 강원도의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자율신설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 운영되어야 함.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지역 대책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음. 부대해체 및 이전에 따라 유류 부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우리 정부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안정적 기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지난 6월 양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 동의가 35만 명을 넘었음.
-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음.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을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에 관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없어, 교육부 통계가 전혀 학교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우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할 것임. 학교폭력 해결의 책임을 지금까지 학교와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제언



심영미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

폭력 문제에 대한 지자체 중심 컨트론타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지자체·경찰·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통합적 관리와 지역중심의 학교폭력 대처와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 일원화가 시급함. 특히 학교 밖 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 변호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풀 구축, 학교현장과 연계하는 예방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또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정된 법률상 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외부 전문위원 영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영입이 부족한 실정임. 지자체의 학교폭력 대책 수립 회의에 심의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 제2차 본회의 / 9월 10일

## 지방 방송사 소멸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박인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강릉2)

-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다르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 과거와 달리 현 정부는 부당한 간섭이나 언론 탄압은 없으며,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최대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역방송이 더욱 그러함. 2009년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으로 인해 상업 종편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광고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언론의 전반적인 지형을 변화시켰기 때문임. 그리고 재난 정보, 지역뉴스, 지역현안 관련 프로그램, 지역 문화 발굴·육성 등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지역방송에 전가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소멸과 함께 지역 방송 소멸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음. 지역

방송이 지역의 가치를 공유할 때 지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 지역방송 보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 지역방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그리고 지역방송과 지역민들의 공생방안으로 지역 지상파 방송기술을 활용한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에 지자체의 지원을 제안함. 중앙방송보다 한 발 앞서 재난정보를 전파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발맞춰 좋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조례를 발의할 것을 약속 드림.

## 강릉 남대천 활력증진 방안 제언



심응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강릉1)

- 강릉 남대천은 농업용수와 상수도의 수원지 역할을 하는 강릉의 젓줄이며, UNESCO 지정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곳임. 그런데 이런 남대천이 지금 갈수기에는 바닥에 물이 없고 여름철은 유해 곤충의 서식처로 둔갑하여, 악취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변화했음.
- 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전주시 전주천 생태계 복원사업과 같이 이제 강릉 남대천도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남대천의 시설물을 예술적으로 정비하고 초화류 식재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 아울러, 남대천의 환경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으로 정비해야 함. 남대천에서 화산 간자전거·산책도로와 안목에서 성산 간자전거·산책도로 조성으로 순환도로 개설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변 순환도로를 확충하고 중심가의 교통체증 완화가 시급함. 그리고 자연석보강 등으로 친환경 보를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시민의 영원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강릉 남대천 하류 지역에 수상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사업과 유람선 도입으로 경포와 연계한 4계절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함. 강릉 남대천의 활력 증진은 도래하는 환경 시대 대비와 자연과 공존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출발점임을 확신함.

##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과제



정유선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

- 위드코로나 시점에서 강원도의 방역체계와 조직을 점검해서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빠른 일상 회복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함.
- 현재 강원도의 방역대응조직은 방역대책추진단이라는 TF팀임.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관련 정책을 총괄 기획하면서,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병상, 장비, 인력동원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및 방역수칙 공표 등, 선제적 조치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반면 방역대응과는 현장방역대응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 일일보고 및 동향관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 관리 등 코로나 직접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전담부서를 만들고, 11월 3차 유행이 시작되자 규모 있는 TF조직을 만들어 대응한 것은 도의 발 빠른 조치였음. 시군 보건소 조직의 '과' 설치와 정원 증원 또한 도의 적절한 판단이었음. 그러나 11월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그에 맞는 방역체계의 전환이 필요함.

⇒ 강원도에 상시적인 신종감염병 대응 조직이 필요함.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허둥지둥 꾸리는 TF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훈련된 역량을 배치해야 함. 감염병 대응에 훈련되어 있는 도와 시군의 보건의료 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공공의료의 대응능력이 감염병 대응 능력임.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공공의료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또한 요양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부 주도의 방역이 아닌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방역체계의 마련 또한 필요함.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에 예산과 조직의 과감한 배치가 필요함.

## 학교폭력 재발방지 등에 관하여



윤지영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춘천1)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 추이가 심각함. 청소년 사망자 3명 중 1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
- 그 원인 중에는 '학교폭력'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음.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날이 갈수록 그 유형과 행태는 다양해지고 지능적이며 교묘해지고 있음. 관리의 사각지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점은 알리는 것이나, 강원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알리지 않았다는 학생이 100명 중 10명에 달하며, 이는 피해사건 해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고통의 치유 및 예방에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것인데 학교폭력을 골치 아픈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학교에서는 조용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부분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덮을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벌칙과 책임 있는 해당 교원에게는 그 경중에 따른 처벌이 선행된 연후에 재발방지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전문상담교사 배치, 사안별 표준매뉴얼 작성 배포, 예방교육 등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 우후죽순 대책이라고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한 처리는 유사 사건의 반복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임.

- 정부가 지난 2월 확정된 2021~2025 제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친환경차는 785만 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함께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엔진을 비롯한 많은 부품이 없어지고, 정비해야 할 부분도 적어지기 때문에 엔진 관련 부품과 정비업 관련 일자리들이 함께 사라지게 됨. 문제는 대기업의 완성차 부문의 일자리보다도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의 일자리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임.
-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라는 사회 대전환 앞에서 도내 산업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에 큰 기여를 한 자동차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 미래차 보급에 따른 현 정비업 등 관련분야 선제적 준비에 관하여



조성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원주7)

- 것인지 모든 분들께 되묻고 싶음.
- 제주도는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음.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정비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으며, 급기야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업체의 적정 공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음.

⇒ 강원도의 자동차 정비업계 퇴출에 따른 상생방안 마련 정책이 필요함. 정비업계, 부품업계 등 자동차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등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정책, 희망을 주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알기쉬운 정책·용어

###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의 종류는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이다.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려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돼야 한다.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학교나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 또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학교, 일반 건물의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과거 1~2년 간 월별 평균 사

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 관련 담당 부서에 방문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이달의 도서

### 메타버스

김상균 지음 | 플랜비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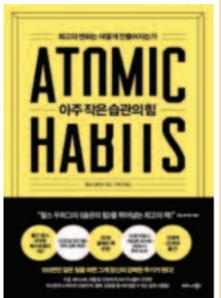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다만 지금까지 일들에 비추어 예견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가장 가까운 과거, 현재를 바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를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추천한다.

### 아주 작은습관의 힘

제임스클리어지음 | 비즈니스북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무엇을 결심하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비아, 안토니우스 반 주트편지음 | 푸른숲



이 책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나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자각, 혼자 서겠다는 각오, 혼자 버티고 견뎌내면서 마침내 혼자 해내는 힘이 있어야만 둘이 같이 있다.'며 좋은 결혼생활의 방법을 알려준다.

### 파친코

이민진 지음 | 문학사상



한국계 1.5세인 미국 작가 이민진의 장편소설. 내국인이면서 끝내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자이니치(재일동포)들의 처절한 생애를 깊이 있는 필체로 담아낸 작품이다.

# 현장에서 약자 입장 대변할 터



비례 더불어민주당

## 허민영 의원

허민영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7개월이 조금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늦게 출발했지만 도민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현장을 백방으로 뛰고 있다.



### 여성 문제, 전통시장, 소방관 복지 등에 관심

허민영 의원은 여성,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다. 현장에서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허 의원은 요즘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다.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가 문을 연 지 오래되어 기자재가 낡고 구형인 것이 많아요. 컴퓨터도 부족하고 미싱 같은 실습기자재도 낡았어요.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기자재를 교체해야 하기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릉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개선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하 1층 어시장의 천장 전선은 얽히고 설켜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는 천장의 전선 정리사업, LED등 교체, 소화기 설치, 벽화사업 등 강릉 중앙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영동지역의 특성상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민원을 접하고 복지 개선에도 앞장설 참이다. 허 의원은 얼마전 출범한 강원소방노조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방관들의 심리 안정 지원, 심신안정실 설치 등을 강원소방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



### 환동해본부 기능 확대 등 도 균형 발전 주장

지난 5월에는 환동해본부 기능을 확대해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해주 목을 받았다.

그는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지역으로 나뉘어 수백 년간 강릉과 원주 두 거점 도시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왔으나 지난 수십 년간은 수도권과 가까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며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더욱 확대 개편하고 정책의 대상과 수요에 따라 현장에 위치하는 것이 알맞은 부서는 이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연구원의 일부 기능도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랜 교직 경험 살려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허 의원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아온 경험을 살려 독서 환경 개선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 사서 미배치 학교가 많아 독서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허 의원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에 양질의 독서환경이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남은 임기 중 독서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 모범 정책사례로 지방정치대상 수상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정유선 의원의 초점은 분명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만들기에 그의 관심은 늘 집중돼 있다.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해온 그는 교육과 복지, 돌봄문제 해결을 통해 강원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비례 더불어민주당

### 정유선 의원

### 마을주인과 마을교과서 만들기 전국 수범사례

정유선 의원은 지난 6월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동체 역량 증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상으로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이 이 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마을 교과서 제작사업 때문이었다.

그는 원주 반곡관설동과 행구동을 비롯해 5개 마을에서 마을 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어르신들로부터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듣고 지역교육계가 편찬위원이 되어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동네 역사를 가르치는 체험형 교재를 만든 것. 여기에 경력단절여성들을 마을해설사 및 강사로 육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큰 호평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거버넌스 수범사례가 되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세계요리교실도 내년부터 도내로 확대

정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안착에도 관심이 깊다. 의료취약지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산부인과 검진 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추진해 성공모델을 선보였던 정 의원은 원주건강가족센터에, 결혼이주여성이 강의하는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베트남,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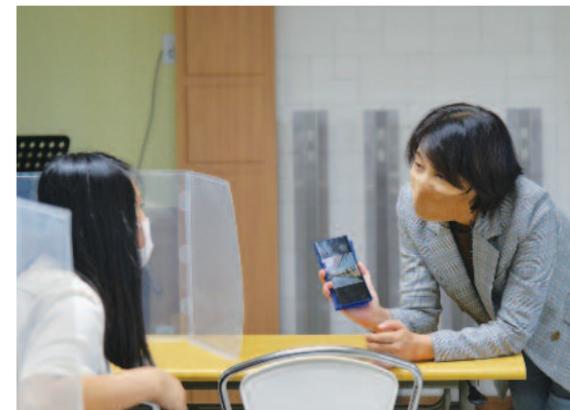
태국, 중국 등 4개국 요리를 16주 간 주민에게 교육하는 요리교실은 크게 인기를 끌며 내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 탈북·학교밖 청소년 등 소외된 아이들을 향한 눈

정 의원의 눈길은 항상 소외된 이들에게 가 있다. 학교밖 청소년, 탈북한 청소년, 아동학대 피해자 등 흔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이들은 늘 그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고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이 더 잘 적응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학생처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극정성이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조례의 결과물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매월 바우처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를 나온 아이들도, 탈북 청소년도 모두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사회가 함께 꿈꾸어야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정 의원의 미소가 맑다.



# 아이들 미래 위해 교육환경 개선 집중



비례 국민의힘

## 최종희 의원

이청득심(以聽得心). 최종희 의원의 의정활동 모토다. 즉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을 그는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어르신 등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의 이야기를 겸허히 수용하며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걷고 있다.



### 교육 안정 위해 공영형 유치원 확대 필요

최종희 의원은 오랫동안 여성계에서 활동해왔다. 그만큼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 노인 문제에 대해 귀가 열려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제 해결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최 의원은 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아교육의 공영화 확대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있는 그는 강릉에 공립단설유치원인 홍제유치원 건립을 추진했고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다. 그는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해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은 더 안정되고 교사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감성화 교실 조성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

최 의원은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용 수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후화된 강릉초등학교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제기해 대규모 공사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도의원으로서 한 첫 사업도 강릉여고 등 강릉 내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일이었다. 강릉여고 80주년 역사자료관과 도서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인문융합복합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옥계초 100주년 역사자료관 사업비도 그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강일여고에는 고교학점제 선정으로 감성화교실을 조성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제거,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비 등을 과감히 지원했다.

강릉교육문화관을 새 단장 한 것도 그의 성과다. 강릉교육문화관은 옛 노암초등학교를 고쳐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최 의원 주도로 예산을 지원해 본관 건물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마음 놓고 책 읽고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구정면 여찬리 경로당, 교2동 도란도란경로당, 홍제동 상선연 경로당, 교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기와 손소독기를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기도 했다.

### 인구정책, 일자리 문제 등 날선 지적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 그는 최근 도정질문을 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기초학력은 최하위로 추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중 질의하였다. 또 인구 소멸 위기를 해결할 해법과 함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원도에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1기 예산결산위원, 2기 결산검사위원, 4기 예산결산위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다양한 제안 받아들여 정책 반영



도의회에 입성한 후 3년간 정수진 의원은 바다 다시마 식재 사업에 열중했다. 또 토종 다시마가 서식하는 유일한 해역인 강원도 동해안 다시마를 활용해 산업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의 노력은 강원도 중장기 해조류 복원 사업계획을 이끌어냈다.

비례 더불어민주당

### 정수진 의원

### 동해 바다 살리기 위해 다시마 식재 정책 마련에 앞장

“어촌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다 사막화를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다시마와 같은 어초를 인공적으로 식재해야 합니다. 갯녹음 현상으로 인해 해조류가 없어지면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이 없어지는 데다 수질 정화도 어렵죠. 다시마는 동해안 살리기의 으뜸 공신입니다.” 정수진 의원은 다시마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사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정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강원도는 해조류 해양환경개선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유용해조류 복원사업,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으로 2035년까지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의약품, 화장품, 다시마 식품 등 다시마 산업화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 꾀해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



의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을 구체화했다.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과 교육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더 많은 아동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향 책정, 돌봄 도우미 증원 등을 주장해 센터 운영 현실화를 꾀했다.

춘천과 원주에만 중·고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 필요성과 함께 영동지역에도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건의해 학부모들의 응원을 받았다.

### 베이스볼파크 조성, 도립대 야구부 창단 제안

최근에는 강원도를 야구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쳐 이목이 모아졌다. 정 의원은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2021년 황금사자기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영동대학교 야구부도 유수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강원도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력있는 야구단이 있는 강원도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베이스볼파크 조성과 강원도립대 야구부 창단”을 제안했다. 도는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

다년간의 정치 경력자답게 도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애쓰는 정 의원의 차분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도민의 시선으로 도민 복지 개선 앞장

심영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며 5분 자유발언을 11차례나 했다.

조례 발의에도 적극적이다. 공동발의를 포함해 조례 발의건수는 무려 39건이다. 그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름나 있다. 원주에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에도 앞장섰다.

비례 국민의힘

### 심영미 의원

### 노인복지, 청소년 분야 조례 잇따라 발의

심영미 의원은 특히 청소년, 노인 복지 분야에 관심이 깊다. 최근에는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독사 위험자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상 부문을 세심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비만 학생을 위한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비만 예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도 눈에 띈다.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암암리에 유행했던 마약이나 담배, 술 등 유해한 약물을 예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청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수영교육을 받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경찰-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로와 장애인 구분한 사회복지 행정 실천 제언

강원도 내 조직에서 경로와 장애인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심 의원은 이미 춘천시도 경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되었고, 강원도의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10년만에 약 3.7배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 행정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전문가가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심 의원의 주장에 따라 조직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인력충원, 위험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직 보호대책 마련을 주장하기도 했다.

### 한중문화타운, 알펜시아 등 따끔한 비판 이어와

심 의원은 도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주목된다. 원주 드림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선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만큼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고 알펜시아 매각 등에 곁을 해왔다. 논란 속에 폐지된 한중문화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외자 유치가 적절치 않다고 따끔하게 비판했다. 또 강원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걱정한 심의와 정산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달라지고 새로 생긴  
**강원도  
생활 조례**

# Q&A

##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발의 >> 심영미 의원

**Q** 학교폭력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도 자주 일어나고요.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A** 요즘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사이버괴롭힘 등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 등 학생들의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요. 이에 따라 지방실정에 맞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방안과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해 피해학생이 보다 마음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반태연 의원 외 4인

**Q** 어릴 적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운동부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실력을 키우고 펼칠 방안이 필요합니다.

**A** 이번에 제정된 「강원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수한 스포츠 지망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군 단위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들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침체기를 맞은 학교 체육이 다시 부흥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발의 >> 김혁동 의원 외 2인

**Q**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학도병들이 많습니다. 학도병 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A** 학도병 정신은 나라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입니다.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는 27만5,200여 명, 강원지역에서는 6,500여 명의 학생이 학도병에 참여했지요. 요즘은 자녀수가 적고, 청소년들이 부유한 환경에서 성적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웃을 돕고 나라를 지켰던 학도병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이타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게 하는 지름길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교육청 차원에서 학도병 선양 관련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발의 >> 원태경 의원 외 2인

**Q**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창의인재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창발성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 덕목이 되었지요. 이에 따라 발명 등 지식재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A**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시행 중인 발명교육 정책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강원도는 지식재산출원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식재산과 발명 관련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식재산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 원태경 의원 외 2인

**Q**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내에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A** 현재 도내에는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재난연구의 싱크탱크기관으로서 재난예측 분야의 사전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입법화하였습니다. 도청 예산상 당장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를 통해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할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답니다.



###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발의 >> 윤석훈 의원 외 1인

**Q** 재난재해가 늘어나면서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명예소방관 위촉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소방활동의 홍보와 이해를 증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강원도 명예소방관을 위촉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이 조례안에서는 명예소방관을 엄격한 기준으로 위촉하고 해촉하기 위해 '강원도 명예소방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로 전국 최초로 명예소방관 제도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민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활동을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발의 >> 신명순 의원 외 2인

**Q** 도민들이 지역농수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경파괴도 줄이죠. 로컬푸드우선 구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번에 「강원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기본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하며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답니다.

### 「강원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위호진 의원 외 7인

**Q** 연안이란 해변가나 방파제 등을 포함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민들이 나서서 연안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연안관리법」제33조에는 연안지킴이를 위촉하고 연안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훼손행위 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연안지킴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이 120개나 되는데다 이 지역의 침식이 심해지고 있으며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연안관리를 하는 연안지킴이를 운영하고 지역의 관련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안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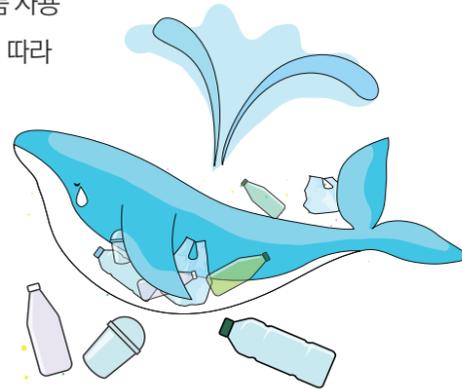


### 「강원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발의 >> 윤석훈 의원 외 1인

**Q**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없을까요?

**A**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도지사는 1회용품 저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소를 홍보하고 우수업소로 선정해 지원해야 합니다.



###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

발의 >> 김정중 의원

**Q** 강원도에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대상 조례가 따로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헷갈려요.

**A** 임업 및 어업분야에서는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와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임업인대상과 어업인대상을 별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강원도 농업인대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인대상만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과 6차 산업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상부문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발의 >> 이병헌 의원 외 3인

**Q**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이 분리되었어요. 강원도에서도 도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A** 「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도무형문화재 등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와 전승자·이수자 등에 대한 인정과 인정 해제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또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육성, 진흥하기 위한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지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문화강좌 설치 시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 >> 김형원 의원 외 4인

**Q**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재위원회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A** 종전까지만해도 문화재위원회는 30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4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강원도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살펴보려면 30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이 분리되면서 개정된 이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시·군·구별로 보존지역 설정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권순성 의원 외 6인

**Q**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해 수당의 지급이나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요?

**A** 그런 규정이 없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먼저 수당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수당 수령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수령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도 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부정 수급했을 때 환수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심영미 의원

**Q**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A** 고독사는 늘고 있지만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아요. 그래서 1인 가구,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이들을 자주 만나고 어려움을 나눌수록 홀로 쓸쓸히 돌아가시는 일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고독사와 관련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독사 위험자를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강원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정유선 의원 외 2인

**Q**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A**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이 조례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사업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남상규 의원 외 3인

**Q** 화장실이나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할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A** 네. 이번에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해 예방 근거를 마련했어요. 법이 강력해지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줄고 있지만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촬영 방지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요. 이 조례는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의 점검 지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요. 이 조례를 통해 안심화장실 문화가 확산되리라 기대되고 있어요.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강원도지사

**Q**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무엇이죠?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대한민국 63%와 강원도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를 평화 콘텐츠와 접목하여 2022년 5월에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발전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산림에서 창출하자는 것이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엑스포 관람객 및 해외초청인사 등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산림엑스포 홍보를 위한 판촉물 또는 기념품 제공, 공모전과 이벤트 개최에 따른 시상금, 기념품 및 상품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그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많다는 뜻이겠죠? 강원도민은 또한 입장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권순성 의원 외 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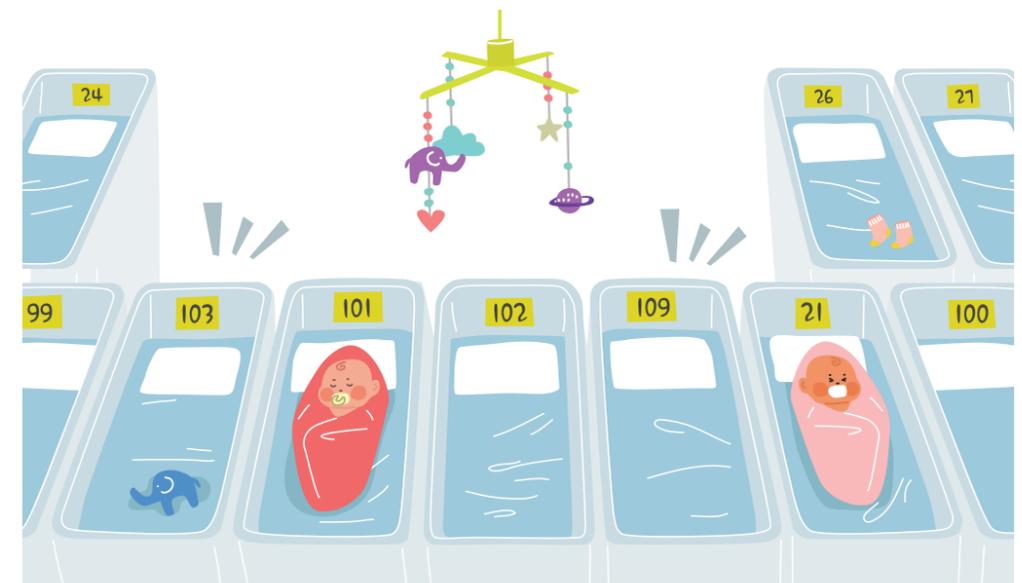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응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도지사 가 독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 프

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할 수 있고 독도교육에 필요한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독도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아이 키우는 것을 부담 또는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임신과 출산의 기쁨이 부담으로 전환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 내 주변에서는 찾기 어려운 믿고 맡길 어린이집,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 부담, 맞벌이 가정에도 예외 없는 여성 중심의 육아 부담 등의 현실을 경험한다면 말이다. 고단한 육아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 자녀 계획을 한 자녀로 줄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며 간접 경험을 한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한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 불안정한 소득, 장시간의 노동시간, 높은 주거비용, 여성 차별적 사회환경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 지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다.

###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대책 발표

지난 7월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5대 개혁 방향은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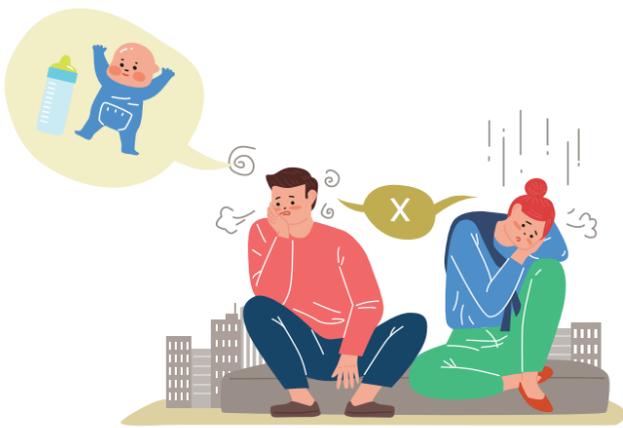
그리고 9가지 주요 정책으로 ①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② 1세 아동의료비 제로화,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 지원 강화, ④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추진,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정부 지원 신설,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14~18세 자녀도 지원),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윈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강조하는 이번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의 특징은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였다'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제기와, 다른 하나는 '출산'에 대한 국가의 강요로 느껴지는 접근방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일단 이 진단은 옳다. 5대 방향에도 동의한다. 다만 이번 발표가 앞서 언급한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서 비롯된 초저출산의 위기, 대한민국 미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하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2005년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 출생아 수는 44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부모 세대가 태어난 1970년의 합계 출산율 4.53, 출생아 수 100만 명과 비교하자면 매우 빠른 감소였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면서 합계 출산율도 1.2대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2017년에 합계 출산율 1.05, 출생아 수 36만 명으로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곤두박질쳤다. 불행히도 올해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출생아 수 32만 명)로 예측되며, 2022년에는 출생아 후 30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 한다. 이번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서는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언급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의 변화는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많은 부분을 예측 가능하게 하므로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합계 출산율 1.05라는 숫자를 단순히 자녀를 1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의 값으로 볼 것만은 아니며, 희망 자녀 수가 1.9명인데도 1명밖에 낳을 수 없는 불행한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질적 지표, 사회적 위기의 신호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합계 출산율 1.0의 붕괴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집중적인 사회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대변하여 준다. 그렇다면 이번 저출산 대책은 이에 충분한가?



### 일-가정 양립 환경을 위한 대책 확대

일단 이번 주요 정책과제들을 보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정책의 폭(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등), 정책지원 대상(예: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정책 지원 수준(아빠 육아휴직 급여인상, 아이돌보미 최대 90% 지원 등)이 확대된 것들이 많다. 특히 시간 정책의 범주에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의 큰 진전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기대되는지,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좀 더 들여다보자.

첫째,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와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월 5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둘째,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고위험 산모 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만1세 미만 아동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비급여 항목을 지원한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중위소득 150%까지, 3인 기준 월 553만 원),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넷째, 집으로 가는 산후조리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100%)한다.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신생아 감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다섯째, 약 20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돌봄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이용비율이 40%가 되도록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의 민간의존적 공급체계에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분명 지금보다 출산, 육아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 30년 장기 전략으로 초저출산 극복해야

그러나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본다면 어떨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전 계층의 문제인데 아마도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부담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이번 대책이 그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했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정책으로 잘 짜였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대책으로 아동과 부모들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위기에 대응할만한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은 분명, 이전 대책과 비교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제의 원인과 진단, 정책의 확대, 특히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 정책 활용이 잘 돼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사회적 투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 희망 자녀수마저 낳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전략, 투자가 필요하다. 그 전략은 최소 30년 이상을 전망하는 장기적 전략이어야 한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지방정부, 기업, 사회의 여러 주체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숙제일 것이다.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행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

## 도의회 65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목민봉사대상 시상식

“도민 행복과 강원 발전 위해 소임 다할 것”



강원도의회는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곽도영 의장을 비롯해 최문순 도지사, 민병희 교육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개원 기념일에 맞춰 통합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초청행사 없이 개원 기념식만 진행하였다.

곽도영 의장은 기념식에서 1956년 9월 6일 초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여 6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직 도의원 등 도민들을 기념식에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앞으로 도의회의 역할이 커지게 된 만큼 도민의 행복과 강원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개원 기념식에 이어 제23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

식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격려하였다.

올해 수상자로 일반행정 부문에 강원도 서울본부 전재선 주무관, 교육행정 부문에 고성 아야진초등학교 김옥선 주무관, 경찰행정 부문에 춘천경찰서 이용재 행정관, 소방행정 부문에 원주 소방서 오정근 소방위, 대민행정 부문에 제1군수지원사령부 608수송대대 고봉희 준위가 각각 선정되었다.

곽도영 도의장은 “목민의 정신으로 봉사를 행하는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많은 공직자들이 이들을 귀감삼아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목민’과 ‘봉사’의 정신을 펼친 수상자들에게 도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세수 추계 정확성 높여 자주재원 확충해야”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회장 허소영 의원)는 9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강원도 재정현황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의 세입·세출운용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하였다.

책임연구자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최종보고

에서 “예산에 강원도 재정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적절한 재원 배분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강원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북강원도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남북 강원도 농업 협력방안 모색”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남북 강원도 연구회(회장 김수철 의원)는 9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강원도 농업협력사업 모델 개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도 관계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사)국제원예연구원 이용범 책임연구원의 과업내용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농업분야 남북협력 사례분석 및 모델링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계획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강원도

남북농업 협력모델 개발 등으로 “농업협력사업이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수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천)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지만 향후 교류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가겠다” 라고 밝혔다.

09. 02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강원지역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촉구 성명서



09. 09

2021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09. 09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포럼



09. 02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강원본부 출범식



09. 08

제303회  
농림수산물위원회  
현지시찰

09. 15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  
선수단 환영행사



09. 15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식

09. 16

강원도의회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09. 08

의장 강원도 방역  
대책추진단 방문 격려



# 언론 속 의정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2일

### 벤처펀드 1700억원, 벤처투자 생태계 밀거름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협약  
강원테크노파크-벤처펀드 관련 9곳  
수선 3개 펀드 운영 80억 지원  
향후 10년간 800억 수혜 전망

올해 말 기준 강원도내 1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관련 9곳이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도벤처펀드 투자협약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1일 오전 10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날 도는 9개 운영 펀드 관련 80억을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800억 수혜 전망이다.

벤처펀드는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 10월 20일 벤처펀드 투자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날 도는 9개 운영 펀드 관련 80억을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800억 수혜 전망이다.

벤처펀드는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 10월 20일 벤처펀드 투자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날 도는 9개 운영 펀드 관련 80억을 지원한다. 향후 10년간 800억 수혜 전망이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3일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세계산림엑스포 현장점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8일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개최현장인 고성을 방문,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6일

### 강원도의회 재정현황 분석 정책연구용역보고회 개최



강원도의회 재정부권·균형발전 연구회(회장 허소영)가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재정부권 강화'를 위한 강원도 재정현황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재정부권·균형발전 연구회(회장 허소영)는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재정부권 강화'를 위한 강원도 재정현황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강원도 기초지자체 2019년 순세계잉여금의 2020년 본예산 반영비율이 39.4%에 불과한 것을 지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8일

### 용문~홍천철도 정부재정 조기착공 서명운동



용문~홍천철도 정부재정 조기착공 서명운동 홍천철도법군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실)와 양평철도추진위원회(위원장 장명우·민문기·이종각)는 7일 용문역에서 허필홍 홍천군수와 정동균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홍천철도 정부재정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8일

### 전국 최초 시니어몰 '봉시크' 평창서 문열었다



평창 봉평전통시장에 중장년층 신규 창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시니어몰 '봉시크'가 7일 오전 정연길 부군수, 이주을 부의장, 김진석 도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픈한 '봉시크'는 봉평 시니어 크리에이티브 존 발효기초주자장관리등을 증축한 연면적 136.65㎡에 다양한 먹거리 원료와 음료,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위한 9~12㎡ 규모의 7개 시니어 점포가 입주해 영업하고 시니어상인의 창업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9일

### 곽도영 도의회 의장 방역당국 직원 격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이 8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도 방역당국 직원들에게 과일디저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09일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세계산림엑스포 현장점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8일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개최현장인 고성을 방문,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10일

### 도의회 예산정책 간담회



도의회(예결위원)와 집행부는 9일 예산편성 방향 설정등 예산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의회(예결위원)와 집행부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13일

### 도, 매각대상 빠진 스키점프대 등 올림픽경기장 활용방안 '고심'

C지구 내 시설 매각 협의 진행  
매각액 300억원 규모 추정  
"KH필룩스 측 긍정적 반응 보여"

속보=알펜시아리조트 매각체결이 완료된 뒤 올림픽경기장 시설 매각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 시설은 스키점프대·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경기장 등 총 3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알펜시아리조트 C지구 내 위치했지만 소유주는 강원도에서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활용 방안을 놓고 강원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결과, 도는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한 KH필룩스(KH강원개발)를 상대로 알펜시아리조트 C지구 내 위치한 올림픽경기장 매각 협의의 진행중이다. 사전 매각의향을 확인

하는 단계로 알펜시아리조트 본매각이 완료된 뒤 올림픽경기장 시설 매각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 시설은 스키점프대·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경기장 등 총 3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알펜시아리조트 C지구 내 위치했지만 소유주는 강원도에서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올림픽경기장 시설 조성비에 400억원이 투입된 만큼 감가상각을 고려, 매각액은 약 3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평창올림픽 이후 시설 운영비에만 매년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 경기장 활용도도 낮은 점 등을 고려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KH필룩스가 유도단을 운영하는 등 스포츠 부문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림픽경기장 매입을 통한 스포츠팀 신설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KH필룩스 측에서 올림픽경기장 매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본매각이 완료되면 협의의 본격화를 계획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림픽의 상징성 훼손 등을虑한 면의견도 제기돼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진석(평창) 도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림픽 경기장이 매각된다면 동계체육인의 훈련 장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15일

### 양양군새마을회 지역 봉사활동 왕성 '훈훈'



양양군은 군새마을회의 봉사활동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했다.

양양군새마을회가 왕성한 지역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봉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은 14일 양양 5일장터에서 마스크와 물티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 방역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 가방 100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 오는 16일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송편을 빚어 홀몸 어르신들에게 300세트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의 봉사와 재난현장급식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새마을회원들의 활발한 현장 활동을 돕기 위해 최근 차량을 지원했다. 최훈

## 강원도민일보 2021년 09월 17일

### 강원노동정책포럼



강원노동정책포럼 강원연구원·강원노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민일보 등이 후원한 강원노동정책포럼이 16일 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노동분야 전문가, 현장대표, 도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렸다.

편집자註: 제10대 강원도의회는 10개의 연구회를 두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10개 연구회의 활동을 알아보고 비전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 불경기에 지친 소상공인 일으킬 방안 찾을 터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



강원도의회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는 장기적인 불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2019년 2월 14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권순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나일주(더불어민주당), 박상수(국민의힘), 신영재(국민의힘), 원태경(더불어민주당), 이상호(국민의힘)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 만나며 지역 활성화방안 모색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만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6월 4일에는 원주에서 원주지역 원도심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원도심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지나해에는 전통시장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연계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도내 전통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유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유통 형태의 전문화, 대형화, 다양화로 인해 쇠퇴기를 맞았다. 이에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는 도내 전통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분석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다.

‘전통시장 내(외)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화나 기술 혁신에 소극적이고 홍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시장을 대표하는 주력상품이 없고 차별화되지 못했으며 상인조직 등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시장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정선의 사례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상권의 혁신과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활용, 특화 먹거리 개발,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상점 노후환경 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는 올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올해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며 수요자들의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되었다. 이 용역은 각 지역별, 유형별, 업종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과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월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마무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분석방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대응사례를 살펴본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지원정책의 효율화, 실용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성호(더불어민주당)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장은 “장기적인 불경기와 유통채널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책을 찾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일자리 소상공인 연구회

등록일: 2019년 1월 29일

회 장: 조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사: 권순성(더불어민주당) 의원

회 원: 나일주(더불어민주당), 박상수(국민의힘),

신영재(국민의힘), 원태경(더불어민주당),

이상호(국민의힘)



철원 노동당사

# 분단 직후 조선노동당 철원군 당사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는 남북분단 직후 38도선 이북이었다. 1946년 이곳에 철원군 조선노동당사가 지어졌다. 1,850㎡의 면적에 지상 3층의 무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러시아 양식으로 지어졌다.

현재 1층에는 방의 구조가 남아있지만 2층은, 3층이 내려앉는 바람에 허물어져 골조만 남아있다.

보기 드문 러시아식 건물이라 정면에서 보면 근사해보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전체적으로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

1층 건물의 구조를 보면 공간이 매우 좁아 주로 취조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8·15광복 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취조 및 구금, 고문 등을 당했다. 한번 끌려 들어가면 시체가 되거나 반송장이 되어 나왔다고 악명 높은 곳이다. 당사 뒤편 방공호에 사람의 유골과 실탄, 철사줄 등이 발견돼 당시의 참상을 짐작하게 한다. 또 건물 3층 앞뒤에 그을린 자국과 포탄,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6·25전쟁의 참화를 알 수 있다.

2002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오래돼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관람은 불가하고 건물 밖 탐방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면서 볼 수 있다.

건물 앞에 '지뢰꽃' 시비가 세워져 있다. 가까운 곳에 지뢰밭을 일구어 만든 대마리라는 마을이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말해줄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주목받기도 했다.

노동당사 가까운 곳에 백마고지 전적지와 도피안사, 철원향교, 학저수지도 있으니 함께 둘러볼 만하다.



구(舊) 철원제일교회

# 독립운동과 반공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곳

구(舊) 철원제일교회는 일제강점기 철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미 선교사 웰번(Welbon)이 1905년 철원읍 중리에 설립했다.



구 철원교회(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930년대 들어 교세가 더욱 확장되어 1936년 관전리 64번지에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당시 교인 수가 5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현무암과 화강암을 쌓아서 만든 석축 건물로 당시 설계도면 원본은 일본 오사카예술대학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사본이 한양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원래 크기는 가로 24m, 세로 12.2m였으며 1층에 소예배실과 10개의 공부방, 2층은 대예배실이 있었다.

1939년부터 철원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한 강종근 목사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0년 9월 철원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이후 서대문형무소 수감 중 1942년 6월 3일 순교했다. 교인들도 철원읍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독립운동을 활발히 했다.

광복 이후 공산정권 아래에서는 철원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청년학생들의 반공 투쟁이 이뤄지기도 했다. 6·25전쟁 때는 인민군 막사와 병동으로 사용됐다. 6·25전쟁 때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돼 지금은 전면 출입구 등 건물 일부와 터만 남아있다.

구(舊) 철원제일교회는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 제23호로 등록됐다. 옛 교회 옆으로 2006년 교회 복원 사업을 통해 '철원제일교회 복원기념예배당'이 세워졌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 예배공간 외에 선교 역사에 대한 전시관이 설치돼있다. 철원 노동당사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 화천 화음동 정사지

# 곡운구곡 옆 조선 유생의 흔적

화음동 정사지는 화음동에 정사(정자)가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조선 현종 때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수증이 화악산 북쪽인 화음동 계곡에 정자를 짓고 은둔생활을 하며 후학을 가르쳤던 곳이다.

제작 연대와 동기, 유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가장 상세하게 그려진 구곡도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당시 김수증은 성리학에 심취해 주자의 책을 탐독했으며 성리학의 음양소식관(陰陽消息觀)을 조경에 응용했다.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팔경(八景), 구곡(九谷)이 있었는데 김수증은 그의 호를 따 화천의 아름다운 계곡 아홉 줄기를 곡운구곡이라 이름 붙였다. 제1곡 방화계부터 제9곡 침석대까지 모두 잘 보존돼 있어 우리나라 구곡 중 실경이 남아 있는 몇 곳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1682년 김수증은 화가 조세걸에게 부탁해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했는데 우리나라 구곡도 중에서 제작 연대와 동기, 유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가장 상세하게 그려진 구곡도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화음동 정사지는 곡운계곡의 7곡을 지나 다리를 건너 왼편 길로 들어서면 나온다. 정자 근처 큰 바위에 의미를 알기 힘든 무늬와 한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당시 김수증에 심취했던 성리학 사상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태극도, 하도낙서, 선후천입궤도 등을 바위에 새겨놓은 인문석이다. 조선시대 성리학 사상의 세계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유적으로 강원도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됐다.

창건 당시에는 송풍정, 삼일정, 부지암, 유지당 등 몇 채의 건물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흠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전부 없어지고 그 터와 자연석, 바위에 새겨진 글자와 무늬만 남아있다. 현재 있는 정자는 복원한 것이다.



### 화천수력발전소와 꺼먹다리

# 침탈과 전쟁, 그 처절함이 서리다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수력발전소로  
국기등록문화재 제109호다.



화천수력발전소(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한강수력전기회사에 의해 제1호 발전기를 착공, 1944년 준공했고 같은 해 10월 2호기도 준공됐다. 그런데 3호기 기기 설치 도중, 4호기 기초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8·15광복을 맞게 됐다. 이때 발전소의 위치는 38선 이북이었다. 6·25전쟁 때 이 발전소를 사이에 두고 격전이 극에 달했지만, 화천 전투의 승리로 수복됐다. 이어 한강수력전기회사를 흡수한 조선전업이 1957년 3호기를 준공했다. 4호기는 1968년 한전에 의해 준공됐다. 1~4호기 모두 일본 히타치 제작소에서 제작, 공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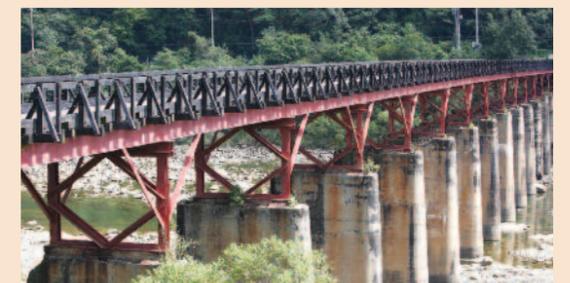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한 발전소로 평가 받았다. 홍수 조절 및 수도권 용수 확보를 위한 기능이 탁월하며 디자인 측면에서 조형미가 돋보이는 발전소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교량인 화천 꺼먹다리는 화천수력발전소와 화천댐이 생기면서 놓인 다리로 화천읍과 간동면을 이어주고 있다. 1945년에 건설한 다리다. 나무로 만든 상판에 검정색 타르를 칠해서 꺼먹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화천수력발전소와 함께 당시의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시

설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근대 교량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소양강과 화천 사이 모노레일을 이용해 수송물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6·25전쟁 당시의 포탄과 총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근현대사의 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난간도 없이 일부 침목이 훼손돼 수십 년간 방치되다 2007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재정비됐고 2004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10호로 지정됐다.



꺼먹다리



## 2021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5, 임시회 75, 예비회기 10)	
2월	제297회 임시회 2.17. ~ 2.26. (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li> <li>■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2.12. 설날
3월	제298회 임시회 3.16. ~ 3.25.(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li> </ul>	3.1. 삼일절
4월	제299회 임시회 4.7. ~ 4.15.(9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도의회 운영</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4.16.~5.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5월	제300회 임시회 5.6. ~ 5.21.(1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5.5. 어린이날 5.19. 부처님 오신날
6월	제301회 정례회 6.1. ~ 6.16. (1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li> <li>■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6.6 현충일
7월	제302회 임시회 7.6. ~ 7.15.(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7.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303회 임시회 9.2. ~ 9.10.(9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행사</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9.6 1956년 제1회 강원도의회 개회 9.21. 추석
10월	제304회 임시회 10.5. ~ 10.15. (11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li> <li>■ 어린이도의회 운영</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월·12월	제305회 정례회 11.2. ~ 12.10. (39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병행)</li> <li>■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li> <li>■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li> </ul>	
필요시	예비회기 (10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 강원의 인물



**박용만**

철원출신 해외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작태에 대해 참다못한 박용만은 1918년 3월19일 장문의 '시국소감'이란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는 "이승만이 국민회 재무직임을 가지고 공금을 잘못 쓴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교정하려는 대의원들을 모함해 경무청에 체포되고 재판받게 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더욱이 재판석에서 국민군단의 항일운동이 죄이고 국제평화의 소란을 음모하는 것이니 조처하라고 호소한 것은 우리 동포의 애국정신을 변천시키고 독립운동을 음해하는 악독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의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다운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